도서관과 토건국가

홍 성 태*

*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과 교수
hongst3@sangji.ac.kr

2006년 6월 10일치 〈한겨레신문〉에 서울시 도서관과 관련된 작은 정정기사가 실렸다. 2006년 5월 3일치의 한 기사에서 2003년 자료를 인용해 '서울시의 경우 시립도서관이 22개, 구립도서관이 12개, 국립까지 합치면 모두 40곳'이라고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 서울시가 '지난 3월 기준으로 시립도서관 22개, 구립도서관 28개, 국립도서관 2개 등 모두 52곳'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해명에 따르면 불과 2-3년 사이에 구립도서관이 무려 16개나 늘어났다. 서울에는 모두 25개구가 있으니, 몇몇 구에는 2개의 구립도서관이 있는 모양이다. 불과 2-3년 사이에 큰 발전이 이루어진 셈이다. 아마도 사회적으로 도서관의 중요성을 알리는 문화운동이 크게 일어난 것이 이런 괄목할만한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제퍼슨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로써 민주주의의 지적 기반이 좀더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앞으로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도서관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근원적인 것은 충분한 도서구입비를 확보하고 있는가, 좋은 도서를 올바로 구입하고 있는가의 여부일 것이다. 도서관은 멋지게 지어 놓았으나 정작 볼 책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거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지 않겠는가? 도서관의 탈을 쓴 독서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픈 기억 때문이다. 예전에 나는 두 곳의 지방공공도서관에서 편지를 받은 적이 있었다. 당시 내가 번역한 책들이 서평 관련 잡지에 소개되었는데, 그 기사를 본 도서관의 직원들이 내게 편지들을 보냈던 것이다. 그 편지들을 잘 보관했어야 했는데 버린 것이 상당히 아쉽다. 그 편지들은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좋은 책을 번역해 출간하신 것을 축하한다는 것과 그 책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자기네 도서관에 기증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것.

나는 그 편지들을 보고 상당히 곤혹스러워졌다. 먼저 별로 축하할만한 일이 아니었다. 한 권은 상당한 학술적 가치가 있었기에 적지 않은 보람을 느끼고 번역했지만, 다른 한 권은 그야말로 돈을 벌기 위해 번역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 두 권 모두 고생한 것에 비해 댓가는 형편없었다. 도서관에서나 구입해야 할 책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책을 기증해 달라는 편지를 내게 보냈던 것이다. 물론 기증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도서관에서

사야 할 책을 저자나 역자에게 기증받고자 하다니, 우리의 도서관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우리의 학술과 출판은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것인가? 이런 우려와 의혹을 가슴깊이 담게 되었다.

1999년 9월에 문화연대라는 시민단체가 발족했다. 이 단체에는 도서관문화위원회가 있었다. 도서관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기 위해 만들어진 분과였다. 이곳에서 2000년 6월에 도서구입비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나는 그 자료집을 보고 그야말로 경악했다. 공공도서관의 국민 1인당 자료구입비가 416원 정도라는 계산결과가 있었던 것이다. 이 실태는 문화연대에서 발간하던 신문인 월간 〈문화사회〉 2000년 5월호에 보도되었다. 이에 따르면, '1999년 말 현재, 전국의 400개 공공 도서관에서 도서구입비로 사용한 돈은 약 198억 원으로 국민 1인당 416원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1999년 미국 하버드대학의 자료구입비는 275억원이었다고 한다.

도서관 수, 장서 수, 도서구입비의 모든 면에서 한국의 후진성은 명백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방공공도서관에서 내게 그런 편지를 보냈던 것이다. 책은 구비해 두고 싶으나 구입할 돈은 없는 상황에서 사서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바로 그런 구차한 편지를 보내는 것이었으리라. 한국의 도서관은 읽을 책이 별로 없다는 치명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그렇게 된 것은 무엇보다 도서구입비가 적절하게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과연 얼마나 해소되었는가?

문화의 시대니 지식사회니 하는 소리들은 드높지만 정작 실제 정책은 반문화요 반지식의 상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이 문제를 토건국가론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토건국가란 '정치인과 관료와 건설업체가 결탁하여 불필요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여서 세금을 탕진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잇속을 챙기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 국가'를 뜻한다. 새만금개발사업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인류적 파괴사업은 지역주의를 통해 극도로 악화된 토건국가의 생생한 사례에 해당한다.

토건국가는 문화의 시대를 가로막고 지식사회의 발전을 저해한다. 예컨대 정부 예산의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자. 토건국가는 문화진흥과 지식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써야 할 예산을 줄여서 갯벌을 없애는 데 쓰도록 만든다. 새만금갯벌을 없애기 위한 방조제 공사에 1993년부터 매년 1200억 원 정도씩을 쏟아 부었다. 여기서 1999년도 전국 400개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불과 198억원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매년 9월의 정기국회에서는 도로공사나 토지공사를 비롯한 각종 개발공사들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성토된다. 그 대표적인 내용은 중복공사와 예산낭비, 그리고 부패이다. 이렇게 사라지는 예산의 1/100만 도서구입비에 쓰더라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개발공사들이 매년 사용하는 개발예산은 몇 조원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토건국가의 문제는 도서관과 더욱 밀접한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도서관정책에 관한 여론이 크게 나빠지면서 도서관 증설은 빠르게 이루어지지만 그에 비해 도서구입비와 전문인력비는 별로 늘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 결과 멋지게 지어진 도서관은 늘어났어도 정작 볼 책은 별로 늘어나지 않고, 도서

관 이용을 올바로 안내해줄 사서도 늘어나지 않는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문화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문화정책이라며 전국에 이른바 '문화의 집'을 설립했다. 그 결과 '문화의 집'이라는 문패를 단 건물들이 갑자기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문화정책을 가장한 건설사업이었을 뿐이었다. 민예총의 조사에서 잘 드러났듯이 '문화의 집'에 문화정책이나 문화인력은 사실상 없었다.

토건국가는 본래 현대 일본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곳곳에서 불필요한 사업을 벌여서 자연을 파괴하고 세금을 탕진하는 정경유착의 부패구조가 현대 일본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보다 더욱 심각한 토건국가의 문제를 안고 있다. 통계로 보더라도 한국의 국내총생산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이르러 일본보다 2배나 더 큰 실정이다. 그 결과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파괴적 개발사업들이 쉴 새 없이 벌어지고, 이를 둘러싼 커다란 갈등과 부패로 나라의 기반이 뒤흔들리고 있다. 또한 예산의 배분이 크게 왜곡되어 나라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펼치기 어렵게 되었다. 토건국가는 지식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토건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역사적 과제이다.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도서구입비를 늘리는 것은 이러한 토건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의 일환이면서 지식사회의 기반을 더욱 다지기 위한 노력의 핵심이다. 도서관은 학술과 문화의 후원자가 되어야 한다. 도서관에서 도서를 제대로 구입해야 학술과 문화가 진흥되고, 그 결과 국민은 더 높은 학술과 문화를 누릴 수 있으며, 또 그 결과 더 높은 학술과 문화의 기반이 닦이게 된다. 도서관은 이처럼 '지식사회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한 핵심고리이다.

우리는 곧잘 일본과 비교를 하곤 한다. 그렇다. 사실 일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준다. 토건국가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독서문화나 도서관 정책에 관한 한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우월하다. 일본에서는 수천 곳의 지역도서관이 학술과 문화의 보급기지로 충실히 구실하고 있다. 한마디로 '선진 일본, 후진 한국'인 것이다. 한국도 일본처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 배울 것은 올바로 배워서 실천해야 한다.